

재외동포기본법안 (안민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240
----------	------

발의연월일 : 2020. 11. 12.

발 의 자 : 안민석 · 강민정 · 김승원
김희재 · 류호정 · 박성준
양경숙 · 양정숙 · 윤재갑
이상민 · 이상현 · 전해숙
의원(12인)

제안이유

재외동포는 750만 여명으로 재외동포에 관한 정책을 체계적·종합적으로 마련하고 이를 중장기적으로 추진하여 재외동포들이 거주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현재는 「재외동포정책위원회규정」(대통령훈령)에서 정부의 재외동포 정책에 관하여 규정하고, 외교부에서 이를 추진하여 왔음.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재외동포들이 대한민국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고, 이들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외동포에 대한 사항을 법률로서 규정하지 않는 것에 대한 지적이 있음.

이에 재외동포기본법을 제정하여 현행 재외동포재단을 재외동포정책 추진기관으로 지정하여 재외동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보호함으로써 재외동포의 모국에 대한 귀속감을 높이고, 재외동포들이 거주국과 모국인 대한민국의 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외 동포들이 민족적 유대감을 유지하면서 거주국에서 그 사회의 모범적인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재외동포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체류하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또는 국적에 관계없이 한민족의 혈통을 지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생활하는 사람으로 정의함(안 제2조).
- 다. 외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3년마다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외교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7조 및 제8조).
- 라.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0조).
- 마. 재외공관의 장이 재외동포 관련 사업의 발굴, 추진, 점검 및 평가 등 사업시행과정에 참여하도록 함(안 제11조).
- 바. 외교부장관은 재외동포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외동포정책 추진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재외동포기본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외동포들이 민족적 유대감을 유지하면서 거주국에서 그 사회의 모범적인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외동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체류하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나. 국적에 관계없이 한민족의 혈통을 지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생활하는 사람

2. “재외동포정책”이란 재외동포의 거주국에서의 모범적 구성원으로서의 정착 및 지위 향상, 한인(韓人)으로서의 정체성 함양 지원 및 대한민국에 대한 이해와 신뢰 증진활동 장려,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 구축, 대한민국 방문 지원 및 재외동포의 대한민국에서의 권익 신장 등에 관한 정책을 말한다.

제3조(재외동포정책의 기본방향) ① 국가는 재외동포가 거주국에서 모범적 구성원으로서 정착하고 그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

는 등 재외동포사회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재외동포가 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대한민국과의 유대감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 구축 및 대한민국 방문 지원 등 재외동포사회와 대한민국 간 교류가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재외동포가 대한민국에 출입국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체류하는 경우 편의를 제공하고, 재외동포의 대한민국 사회 적응을 위한 지원을 함으로써 재외동포가 대한민국에서 권익신장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국가는 재외동포의 역량을 대한민국 발전에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재외동포의 인적 자원 개발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국가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외동포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다양한 교류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재외동포의 민족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한글교육, 전통문화행사 등 민족교육, 문화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재외동포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 및 국가별 현지 특성과 세대 및 연령 등 다양한 여건을 고려하여 각종 시책을 수립하고 시

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재외동포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국제사회와의 조화) 국가는 국제법 및 조약을 준수하고 재외동포 거주국의 정책 및 관할권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재외동포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재외동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외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3년마다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외동포정책의 정책방향과 추진목표
2. 재외동포정책의 수립 및 조정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4. 그 밖에 재외동포정책 수립 등을 위하여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제10조에 따른 재외동포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시행계획 등의 수립 및 평가) ① 외교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별로 다음 연도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외교부장관은 이를 종합·조정하여 제10조에 따른 재외동포정책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③ 재외공관(「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에 따른 대한민국 재외공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시행계획에 따라 관할지역의 재외동포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재외동포 활동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외교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10조에 따른 재외동포정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업무 협조) 외교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재외동포정책위원회) ① 재외동포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위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재외동포 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변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재외동포 업무의 부처 간 협조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재외동포정책과 관련하여 국민 참여 및 민·관 협력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외동포 정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준비하고, 위원회의 위임을 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재외동포정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재외공관의 역할) 재외공관의 장은 재외동포정책의 원활한 시

행을 위하여 재외동포 관련 사업의 발굴, 추진 및 평가 등의 과정에 참여하여야 한다.

제12조(재외동포의 의견 청취) ① 국가는 재외동포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함에 있어 재외동포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재외동포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 청취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재외동포정책 추진기관의 지정 등) ① 외교부장관은 재외동포 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외동포정책 추진기관(이하 “추진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추진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지원
2. 재외동포정책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3. 재외동포 관련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4. 재외동포를 위한 교육, 상담, 홍보 등 지원사업의 실시
5. 재외동포 활동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6. 재외동포에 대한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
7. 그 밖에 추진기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③ 외교부장관은 추진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추진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제14조(국회 보고) 정부는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상황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